

민주 “尹 정부,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 명백한 직권 남용”

이재명 “부당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기도에 맞설 것” 박광온 “정권 위기가 언론 장악에서 시작된 것 명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고, 경찰이 MBC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직권 남용을 통한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 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며 “정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선호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 보장된 공무원들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과 똑같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파탄나고 외교안보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위급한 때에 정부는 국가 역량을 방송 장악에 허비하고 있다”며 “그런 욕심의 100분의 1이라도 국정과 민생에 쏟아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설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제 경찰이 1년 이상 지난 사건 갖고 MBC 본사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며 “기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누군가와 공유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의 뉴스룸까지 압색을 시도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목적이 한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언론 장악 시도를 본격화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정권 위기가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노를 피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정권 위기가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

원장 면직은 직권 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라며 “어제 방통위원장 면직에 MBC 압색까지 자행하면서 민주주의의 강을 건너 가버렸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청문회 자료를 개인정

보 유출이라며 MBC 기자 집과 보도국 뉴스룸, 그리고 국회 사무처까지 압색한 것은 검찰의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변용일 기자

尹, 사회보장전략회의 주재...사회서비스 중산층 확대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어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사회보장제도 패키지화·중복사업 통합 등 보고

14개 부처 장·차관, 정부 내 9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조 장관은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보고했다. 이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조 장관이 보고한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해 수요자들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사회보장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은 그간 취약계층 위주였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맞춤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소득기준 상한을 폐지·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줘 구매력 등 능력에 차등 부담을 전제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와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에 이어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과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논의된 방안들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민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괴물 폭염 대응위한 에너지 추경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괴물 폭염과 올 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비해 에너지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는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가롭게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작년 여름, 100년 만의 폭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비극을 이미 겪었다. 정부여당이 이를 잊지 않았다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논의에 응답하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동남아를 덮친 체감온도 54도의 ‘괴물 폭염’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다. 괴물 폭염은 전례 없는 불철 폭염으로 여러 나라에서 사상 최고기온을 경신했고,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괴물 폭염의 전조

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4월 중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대구·경북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다. 강릉과 속초는 5월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1분기 전기요금미 전년 동기 대비 30%가 올랐는데, 에너지 취약 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치는 전년 대비 300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심지어 지급 대상도 작년보다 30만여 가구를 줄이려 했다”며 “정부는 연초 국민을 강추위에 떨게 한 난방비 사태를 재연해 국민을 찜통에 빠뜨릴 생각이 없다. 탄소중립은 산업계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폭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경제 부담은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